특집 문민정부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허구적 이데올로기의 노동탄압 끝나야 한다

'국제화'명분으로 일부계층에 고통강요

신기술위한 과감한 설비투자 우선돼야

'국제화', '정보화', '21세기 한국', '국가경쟁력' 등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귀를 따갑게 했던 용어들이다. 이러한 말들은 결코 나쁜 말들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이 용어들은 상당한 위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손을 묶었다. 어떤 이는 이것들을 이용해 화려한 변신을 하기도 했다. 한때 양담배 등 외국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출의 침병 역할을 했던 매판변호사들이 국제화시대의 가장 탁월한 전문가로 옷을 바꿔입은 것은 그 한 예가 되지않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이러한 용어들이 가진 본뜻과는 다르게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92년 대통령 선거 때의 '신한국 창조'라는 단어를 대신해 등장한 이것들은 새로운 경제이데올로기의 축약된 형태이다. 이러한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93년 7월 2일 김영삼 정권의 '신경제 5개년 계획' 발표 이후다. 경제와 밀접한 이 단어들은 곧바로 효과를 나타냈다. 새로운 경제논리가 탄생되었다. 바로 '고통분담론'이 그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이 논리의 주요 고통분담자는 지금까지 고통분담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해온 노동자와 서민이 아닌 경제적 중요를 누려온 소수의 재벌과 불로 소득자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말했다. 그렇지만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대다수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민중에게 고통분담자 역할이 다시 맡겨졌다.

'국제화' 명분아래 소유분산과 분배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신경제'는 이젠 빛바랜 1년전의 달력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정책에 가려졌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베일을 벗고 있다.

신경제 정책이 시행된 후 우리의 경제사정은 어떠한가.

'경제혁명'으로까지 불리던 금융실명제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도전에 직면해 핵심내용인 '자금출처조사'가 사실상 백지화 되어 '속빈 강정' 꼴이 되었다.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예금통장을 만드는 것 이상 그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애초에 얻고자 했던 경제개혁의 중심토대가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다.

"재벌의 체질개선을 위해 자본의 집중을 막고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호언 장담했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작년 5월 사정정국 때 재벌들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멀사 분리, 합병, 매각 등으로 국가에 기여하겠다."고 앞다투어 발표했다. 하지만 그러한 대국민적 약속은 부도어음이 되었다. 그대신 재벌들은 신경제 정책 덕택(?)에 SOC(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 대기업 여신관리한도 철폐, 각종 규제 완화 등 특혜를 받고 있다. 신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대기업을 위한 '특별정책'이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본질은 자본의 효율적 재편성과 노동착취의 강화를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등장한 '국제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은 노동자를 억압하는 또하나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제 5개년 계획 발표에 즈음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정부가 "폭력으로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거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자를 협박했던 사실은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올해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제경쟁력 향상의 최대의 걸림돌은 높은 임금"이라고 하면서 "급변을 노사분규가 없는 해가 되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이어서 올해에도 경총과 노총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자율적인 노사화합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아래 '노·사·정'간의 이른바 '사회적 합의'의 강요를 통해 임금상승을 억제시키고, 기업규제 완화 조치와 노동시장의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내용은 기업규제 완화 조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관리자 의무고용의 완화, 사업장 근로감독의 완화 등이고 노동시장 완화 조치내용은 근로자 파견법 도입시도, 파트타임 고용제 도입,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인데 이러한 조치들 전부가 노동자의 고통전담을 기초로 하고 있다.

노동자 임금수준을 억압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본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기술과 고품질, 높은 부가가치가 국가경쟁력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의 시대도 여시 '국제화' 흐름이 아니다.

과감한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확대, 전문산업인력 양성 등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대기업 체질개선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정 21세기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통한 노동탄압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김 종 원

('말'지 기자)

강단시론

강 태 완

(정경대 교수 신문방송학)

양치기 소년의 비극

지난 주말 저녁 9시 뉴스를 타고 전국에 방영된 남북 실무접촉회담에서 북측대표의 이른바 '불바다' 발언이후 언론이란 창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우리 주위의 정세는 손대면 터질 것같은 긴장감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곧 배치된다고 하며,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북한이 도발을 가해올 경우 이를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는 국방장관의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의 이른바 '신작전계획 5027' 5단계 전략에 따르면 전쟁 발발시 서울 이북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전선을 돌파하여 북진 상륙작전을 펼쳐 북한내 전략지역에 군정을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에 남한 주도하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른바 '불바다'론에 대한 화답으로 나온 남측의 이같은 '괴바다' 시나리오는 매눈은 함박눈과 꽃샘추위에 움츠리든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가 이례적으로 전파를 타고 안방에 전달된 데에는 청와대 등 고위층의 의중이 상당히 작용되었다 한다. '불바다'운운의 현장화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얻게 될 정치적 효과까지 고려된 조치였음이 분명하다. '중학생 이상의 북한 주민이 폭탄주머니를 차고 다니고, 남한의 공격목표가 표시된 전쟁지도를 지녀'였다는 식의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리면서 전쟁공포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몇몇 일간지들의 일련의 보도 역시 동일한 의도를 깔고 있는 기획된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문제는 정권차원에서 생사를 거는 듯한 남북의 이같은 전쟁위협카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유언비어가 국민학교에 퍼져 학생들이 동교를 거부했던 것이 불과 얼마전의 일이었고, 유사한 소문에 머칠이나 목숨을 부지하셨다고 라면등을 사재기하는 소동이 일어난 적도 식상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일련의 사태에서 단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보도만 나왔을 뿐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동요를 느끼기는 힘들다고 한다. 이에 어느 일간지는 국민들의 이같은 반응과 정치권의 침묵을 '북핵불감증'이라고 쓰고 있다. 또 다른 일간지는 그 원인을 1년이상 지리하게 끌어오면서 타협과 결렬사이의 아슬아슬한 곡예를 거듭했던 핵사찰협상 자체에 돌리면서 '늑대와 소년' 우화에 비교하기도 한다.

남북회담의 장면을 생생한 화면으로 그리고 나흘날에는 통기사이하 각지면으로 채웠던 언론으로서는 예상외의 국민들의 '무감각한 반응'이 겸연쩍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몰공격으로 서울이 곧 잿간다면서 코흘리개의 저금통까지 털게 했던 평화의 범려선이 한 정권의 웃지 못할 사기로 밝혀졌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막대한 국방예산을 갖고서 올곡사업이라는 무기거래로 뒷돈이나 챙겼음이 드러난 시점에서 국민적 냉소주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핵사찰과 북-미회담의 추이를 꽤나 주의깊게 지켜본 사람이라도 최소한 언론의 보도만을 통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한 수 있었던 경우는 드물었다. 북한에 핵이 있는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핵 존재여부 자체에 대한 언론의 무수한 추측성 기사들은 북한의 패쇄체제 때문이라 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정가에서 나오는 초강경발언들을 보도로 접하면서 이제는 '북한의 최후가 멀지 않았다고 곧단한시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북-미간 혹은 북-IAEA간 회담이 타결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헛갈렸던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태추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쫓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초강경보수파들의 소신성 '희망발언'을 '사실'로 윤색했던 우리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관행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의 경우로 타결직후 우리 언론은 그 이전에 남발됐던 각종의 추측성 기사들이 무색했는지 지금까지의 '오보'의 책임을 북한의 기회주의적 줄타기외교에 돌리는 '발배른 수완'을 보여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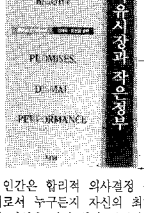
'불감증'을 놀먹이며 무감각한 국민들을 나무라는 언론이 오히려 '늑대와 소년' 우화에 나오는 그 '경망스러운 소년'이 아니었는지 시간차게 돌이켜 볼 일이다. 다달이 실시되는 민방공훈련을 짜증한번 내지않고 감내해왔고, 현역복무에 예비군, 나아가 민방위까지 몸으로 때워가면서 안보를 위해 '한몸 바침' 기오를 다져왔던 국민들일지라도 자신의 운명이 소모적인 전쟁카드의 볼모가 되는 악몽에 가위눌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을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한-미연합군의 이른바 공세적 방어전략이라는 전쟁게회을 마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듯 한반도 지도에다 군함과 비행기등의 그림까지 걸들어 지면을 장식하고 있어 우리 언론이 아만로 어쩌면 자각하지 못할 정도의 '전쟁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를 일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심지어 러시아까지 북한핵문제를 빌미로 주판튕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언론이 한목소리로 외쳐는 '국제화'가 불과 몇마일 전방의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메아리로 되돌아 오고 있다. 21세기를 향해 나가기는 커녕 역사를 백년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시점에서, 북핵 공조의 대가로 받아낸 일왕의 '슬픈 마음'이 '동석의 염'보다 진일보 했다는 언론의 장담에 넋놓고 춤출수 만은 없지 않은가.

'분단언론'이 냉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떡의 몫이 통일로 얻을 수 있는 민족전체의 이익보다 여전히 큰것이 사실인 모양이다. 한반도를 지리적으로 갈라놓은 철조망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언론이란 창을 통해 우리의 의식에 굳힘되어 반영되는 세상의 모습이다. 순간적인 지루함을 덜려줬던 우화속의 소년에게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우리 언론은 곰곰이 되새겨볼 일이다.

서 평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나남출판사·값 7천5백원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행위를 하며 이럴 때 사회의 이익이 최대화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전제이다. 그러나, 순수한 자유시장체제가 왜곡된 분배구조를 가져오고,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팽배해지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비대해진 정부기구를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왔다.

그러면, 비대해진 정부가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시장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학의 기본전제에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인가? 정부의 규제나 사회보장제도는 정말 공평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제도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1976년)인 미국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 박사는 그의 저서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Bright Promises, Dismal Performance)'에서 "No"라고 대답한다. 이 책은 저자가 Newsweek지에 3주에 한번씩 싣던 칼럼들을 모은 것으로, 저자의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정부의 본질적이고 정책적인 오류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주의 입각 정부 오류 비판

사회 후생위해 작은 정부돼야

주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50% 이상이 소득수준 상위 25%안에 드는 집안의 자제들이며, 5%에도 못되는 학생들만이 소득수준 하위 25%이내이고, 특히 졸업후의 소득수준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수준보다 충체적으로 더 많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정부의 계획이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당하게 또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제도 및 많은 세금제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익이 존중되어야 합이로 불구하고 정부관료 체제는 경쟁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관료 체제는 그 조직을 늘리고 그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잘못은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제도 자체에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자유시장을 정치적 시장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의 역자들(안재욱 : 본교 경제과 부교수, 이은영 : 숙명여대 강사)은 번역 동기를 두가지로 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자유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것이 첫번째 동기이다. 자유주의를 보나 더 적절히 이해하는 데는 프리드만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이다. 두번째 동기로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정책적 문제가 프리드만이 지적한 미국의 1970년대 상황과 기본원리와 모순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적 함의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역자들은 책의 제목을 원본과는 다르게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로 정했는데, 이는 오히려 원본의 내용에 더욱 충실한 제목이라 하겠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싫든 좋든 시장에서의 거래자들이며 하루하루를 정부의 간섭속에서 간섭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수가 작아지고 시장에 대한 간섭이 사라질 때, 즉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성취될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경제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경제순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져 더 큰 개인이익 및 사회후생이 달성될 것이다.

박 종 국

(정경대 교수 경제학)

HYUNDAI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94 환경관리 모범회사
"현대전자는 깨끗한 지연을 생각합니다"

우리 감각에 꼭맞는
현대 파자마 폰 LesGo

♥ 편리한 깜찍 사이즈!
앙증스런 초소형, 초경량(50g)에 착탈식이라 휴대가 간편해요.

♥ 다재다능, 깜짝 성능!
언제 어디서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광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어두운 곳이나 밤에도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어요.

♥ 탄탄한 품질, Q!
국내 최초로 Q마크를 획득, 견고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이 이미 입증되었어요.

LesGo의 주요 기능
◆자기 전화기능 ◆스케줄 및 우선기능 표시기능
◆적발시 벨소리 ◆AUTO 기능
◆자동 조명 기능 ◆자동전원 ON OFF 우선기능
◆주요번호 자동저장기능 ◆MESSAGE BACK-UP 기능
◆MESSAGE 저장 및 ◆MESSAGE 등록 최고 기능
MESSAGE 조회 기능 ◆EMERGENCY CALL 기능(HDP-500)

현대전자

판매원 ●서울/경인지역 012·015 전 수락대리점
015 나래이동통신 : 코레이 정보통신 7136 015
●충북 : 015 서울이동통신 : 라이키 (주) 756-4000
문의처 ●서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9-6 태광빌딩/D
이동차량영업부 528-9 566-9
●구내매점 : 서울이동통신 366-2419
나래이동통신 366-2419